

북한산성 내 비지정문화재 ‘경리청과 상창’ 터에 대한 학술조사 착수

글 김수현(고양시 학예연구사) 사진 문화유산관광과



경리청과 상창, 19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북한산성(北漢山城)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에 소재한 북한산성은 한강 북쪽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 요새 북한산에 축성한 산성이자, 국가 사적 제162호로 지정(1968. 12. 5.)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17~18세기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수도 한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1711년(조선 숙종 37) 삼군문 소속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합심하여 단 6개월 만에 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산성은 축성된 이후 내부에 산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방어를 위해 다양한 부속시설이 건립되었다. 임금이 왔을 때 머무르는 임시 궁궐인 행궁을 비롯하여 전란 발생 시 적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관청인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과 어공미와 군량미를 보관하는 호조창 등이 자리를 잡았다. 또 북한산성의 상시적 관리와 방어를 위해 동장대 등 군사지휘소 3곳과 사찰 11개를 새롭게 창건하거나 중건하여 승군이 머무르게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속시설은 북한산성 및 행궁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1712년(숙종 38)에 설치한 경리청(經理廳)과 그 부속 창고인 상창(上倉)을 꼽을 수 있다.

격동하는 역사 속 경리청과 상창

1745년(영조 21) 성능스님이 작성한 지리서 『북한지(北漢誌)』에는 ‘경리청과 상창은 행궁의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전에는 통제사였지만 지금은 관성장인 이우가 쓴 팔비현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관성장 1명으로 병사와 수사를 지낸 사람을 왕이 임명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1808년(순조 8) 왕명으로 제작된 행정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관성소는 상창에 있다. 대청 18칸, 내야 12칸, 향미고 63칸, 군기고 3칸, 집사청 3칸, 군관청 4칸, 서원청 4칸, 고지기집 5칸, 월랑 2칸, 각문이 7이다’라고 기록하여 그 규모(총 114칸)가 산성 내에서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경리청은 설치 이후 삼군문(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보미(保米)를 상창에 보관하였고 또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造紙署)에서 제조한 종이도 팔아 큰 수익을 내어 재력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러나 숙종에 이어 경종이 즉위하면서 혁파 논의가 자주 일어났으며,



1747년 군영 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총융청에 부속되었다. 이후 1891년(고종 28)에 수도 한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북한산성 총융청에 부속된 경리청을 분리하여 다시 설치하였으나, 3년 뒤인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군제가 신식으로 개편되면서 결국 폐지되어 20세기 초반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리청과 상창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근대기 시각문화를 대표하는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리청과 상창 터

경리청은 북한산성 및 행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던 관청 유적이자,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산성 내 관청 건물로는 그 터가 온전히 보존된 유일한 유적으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유적은 덕양구 북한동 59번지에 소재하며 사적 제479호로 지정된 북한산성 행궁 터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육안으로만 보아도 건물의 축대와 여러 기의 초석이 확인되며, 그 밖에도 담장, 우물 자리도 남아 있다. 그러나 매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유적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등산객에 의한 추가적 훼손도 우려되어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올해 3월 시에서는 수해, 사태 등 보호·관리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 조사 예산을 국비 100% 지원하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에 경리청과 상창에 대한 시굴조사 사업을 신청하였고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말에 해당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과 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경리청과 상창 터 3,904㎡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초석을 마련

시는 이번 경리청과 상창 터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운영 시기 등을 정확히 밝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도비 확보 이후 연차적인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져가는 축대와 담장, 우물 등도 원형대로 보수할 예정이다. 이제 경리청과 상창 터에 대한 학술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경리청과 상창 외에도 북한산에는 향후 학술적으로 그 규모와 형태를 규명하고 문화재로 지정 유도할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훈련도감, 금위영, 호조창 등 관청시설을 비롯하여 보국사, 보광사, 용암사, 원각사 등 승영사찰의 터도 곳곳에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한 연차적인 학술조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북한산성에 대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향후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리청과 상창 터 외부 축대 현황